

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금품수수 의혹’ 고발

농협중앙회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공금유용·특혜성 대출 등 14건 수사
강호동 회장, 예산 4.9억 유용 의혹
조합장엔 과도 기념품·상조비 논란
근본적 농협 개혁방안 마련 예정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
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
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
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
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
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
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
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
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메트로신문

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
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
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
적이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
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
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
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

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
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대회 협찬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
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
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
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
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

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
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
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
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상조비를 지원
받았으며, 중앙회·자회사 임원들도 황
금열쇠·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
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
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
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
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
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
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
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
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
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
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
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
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
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유통 개선’ 등 논의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현장·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위
한 목적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
체’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
관,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
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
번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
행 방안과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세부 내용
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설치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뉴시스

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 8월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으로 올해 하
반기에 시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
을 반영해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친 농산물 유통 관련 현안을 논
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업담합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
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
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익편취 등 주요 위반 행위
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현행보다 대폭 상
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과
감경제도 축소를 통해 징벌적 성격을 강
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
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

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
형의 부과기준을 하한이 크게 오른다. 담
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부
과기준을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이 조정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
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
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상향

해 약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액과징금 하한도 대폭 상향된다. 대
표적으로 중대성이 약한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의 정액과징금 하한은 500만원에
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
회 위반 전력이 있을 때 10%를 가중하지
만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0%
까지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 베트남에 231만弗 규모 e플랫폼 진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공급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 기반 발전
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분야 e플랫폼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한전은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 산하의 제3발전총공
사(EVNGENCO3)와 지능형 디지털발
전소(IDPP)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푸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총 3개 호
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1만 달러, 사업
기간은 16개월이다.

IDPP 플랫폼은 한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솔

루션으로 초대용량 발전소 운영 데이터
의 실시간 수집·저장과 AI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해 설비를
유연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3개 호기 구축을 시작으로
EVNGENCO3과 총 14개 호기(6.3GW)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나아가 베트남 전역 68개 발전소를 대상
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4760만 달
러, 동남아시아 전체 확대 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중장기적 매출 잠재력을 확
보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e플랫폼 시장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
척하고, 한전KDN과 오션정보기술 등
국내 4개 중소기업과 구축한 동반성장
모델로 그 성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
징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대, 기술직업훈련 특화 학·석사 양성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기술직업훈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학사·
석사 연계 교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기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
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인
재학부를 신설하고, 개발도상국 기술직
업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
을 개편하는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사과정에는 총
55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우즈베키
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으로, 자비유학생과 정부조

청 외국인장학생(GKS)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두
전공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
정은 영어와 한국어 트랙을 병행해 운영
되며 ▲초기 학업 적응 ▲전공 역량 강
화 ▲국내 산업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
로 설계됐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수학·물리·전산 등 기초과목과 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3학년부터
는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
이 시작되며, 4학년에는 심화 공학교육
과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
화한다. 대학은 졸업 이후 국내 산업현
장 취업과 국내 정주까지 연계 지원할 계
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